

SK 사태, 정부 개입흔적 곳곳에

석유공사, SK 원유 수입 대행할 듯 ... 해외투자자 실망 섞인 평가

정부가 SK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산업자원부이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SK의 원유 수입을 5억달러 규모에서 대행기로 하고 6월2일 중 대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K는 채권단이 USANCE(기한부 어음) 한도를 대폭 축소해 원유 도입에 차질이 예상되자 석유공사를 통해 위탁계약 형식으로 원유를 도입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SK가 석유공사에 적정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토록 돼 있다고 산자부 측은 전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SK글로벌 사태의 처리와는 무관하며 국내 원유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부 예산이나 석유사업기금 등에서 SK 원유 도입을 지원하는 자금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5월31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한국이 석유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업계에서 SK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원유 수입 대행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SK 처리가 최근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시험대로 삼아왔던 해외투자자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가 채권단의 유류대금 지급 중단에 맞서 SK글로벌 주유소에 유류제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벌어질 뻔했던 유류대란 역시 정부 개입으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5월29일 SK가 3200여 개에 달하는 주유소 유통망을 관할하고 있는 SK글로벌에 유류제품 공급을 중단하자 SK 측에 유류 공급을 재개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채권단과 SK그룹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SK 측에 전달하고 국민을 불모로 하는 사태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03>